

일부 주민 반대에 '턱' 막힌 과속방지턱...노인 안전 '어쩌나'

화정아이파크 인근 서구노인복지관 앞 도로 과속방지턱 못 만드는 이유는

“고령보행자 위험” 복지관측 설치 요구에 서구청 “주민 동의 받아와라” 동의 구하러 갔다 실패...하루 500명 복지관 이용 속 사고 날까 ‘걱정’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철거를 진행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현대산업개발)이 철거현장 인근에 보행로를 만든 이후 자동차 과속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담당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어 고령 보행자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인근 광주시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에서 과속방지턱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부족과 일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조성이 쉽지 않다는 것이 서구의 입장이다.

30일 복지관에 따르면 최근 광주시 서구 화순로 220번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서구 담당과에 구두로 요청했다.

하지만 서구는 “주민들의 동의부터 받아와라”는 답변을 내놨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철거-재시공 현장 인근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안전 등을 이유로 불법정거장들을 정리하고 ‘안전 보행로’를 만들었다.

하지만 주변에 차량이 없어져 도로가 뚫리자 오히려 차량이 더 빨리 달리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관의 설명이다.

보행로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오히려 차량들이 이면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웃도는 속도로 달리기 시작하면서 노인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로식당,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기 위해 복지관을 찾는 매일 500여명의 노인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

복지관의 입장을 전해들은 현대산업개발 측은 과속방지턱이라도 설치하러 했지만, 공사현장과 상관없는 도로라는 점에서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서구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턱이 생기면서 지면에 충격이 가해지고 소음이 발생하므로 인근 지역 모든 상가-거주민의 동의를 필수라는 입장이다.

결국 복지관 관계자가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과속방지턱 설치 지점으로 가장 가까운 주민들을 찾아가 동의를 구하러 갔으나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관 측은 “일부 주민이 현대산업개발 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동의를 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은 현대산업개발과 보상합의를 하지 않은 주민 중 일부라는 것이 복지관의 설명이다.

결국 서구는 복지관이 주민들에게 직접 동의를 받아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일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복지관은 노인들의 교통사고가 발생할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신성화 서구노인종합복지관장은 “거동이 불편



30일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철거 및 재시공 현장 인근에 설치된 안전보행로와 횡단보도.

한 노인들 옆으로 차들이 쉿쉿 달릴 때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도 과속방지턱 하나만 들기도 쉽지 않으니 답답하다”며 “우선 이웃 상가 입주민들과 이야기를 잘 풀어 동의를 얻어보겠지만, 올해까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 담당자는 “대안 삼아 내년 이곳 일대를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광주시에 신청할 계획이다”면서 “하지만 지정 과정은 1년여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그동안은 달리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사건 브로커’ 관련 현직 경찰 2명 영장 기각

검찰이 ‘사건 브로커’에게 정략을 받고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 등으로 현직 경찰 2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하중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공무상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수사팀장 A경감과 뇌물수수혐의를 받는 광주북부경찰 B경정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하 판사는 “아직 혐의 입증은 다두고 있고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면서 “2명 모두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건브로커 C씨는 수사기관 정략을 대가로 다른 공범과 함께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용의자로

부터 고가 외제차 등 18억5400만원을 받아 구속된 상태다.

A 경감은 지난해 하반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지낸 D전 경무관(구속)의 정략을 받고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일부를 무마하거나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피의자가 브로커 C씨에게 수사무마를 대가로 거액을 넘기자 C씨가 D 전 경무관을 통해 A경감에게 정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B 경정은 광산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0~2021년 사건브로커 D씨에게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사건 일부를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강종만 영광군수 항소심도 ‘직위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선고...강 군수 상고 방침

‘선거 때 도와 달라’며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벌금 200만원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강 군수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강 군수는 1심에서와 같이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먼 친척관계인 A씨가 어렵게 살

고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게 과일 선물 세트를 구입하는 대신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넨 이후 A씨는 강 군수 출마관련 기사들을 게재했고, 강 군수도 출마 입장문을 A씨에게 보낸 점 등을 보면 친척에게 순수한 의도로 경제적 도움을 준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군수는 다수의 선거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는 점, 과거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적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서 나온 강 군수는 “선거를 도와달라는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허석 전 순천시장 항소심 감형

피선거권 제한 받지 않아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재판을 받던 허석 전 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피선거권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혜선)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의 항소심에서 1심의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허 전 시장은 시장 당선 전인 지역신문 대표 시절 국가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신문사 관계자들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률 업무라는 무형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법률 업무는 형식적인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에 불과하다”면서 “기부행위범위도 미약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연말연시 음주운전 주·야간·심야 상시단속

광주·전남경찰청 오늘부터

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광주·전남경찰청과 광주·전남 자치경찰위원회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연말에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집중단속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 기간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하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숙취운전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해 불시 숙취음주 단속도 진행된다.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도 단속대상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